

■ 노대통령 왜 '이종석장관 발언' 옹호했나

美 대북강경책에 의도된 '간접제동'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다'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인식과 의중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옳다, 그다'고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국회 논란을 회두로 삼아 "한국 장관이 '미국 정책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면 안 되느냐"며 국회의 추궁에 대해 장관들의 당당한 답변을 주문하는 여론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통과 이후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 등 강경책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묻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미국과는 항상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한미 견해가 똑같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만 항상 옳고,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왼쪽)의 발언에 대해 "한국 장관이 '미국정책 성공아니다' 말하면 안되나"며 이장관 발언을 옹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문제 제재보다 외교로 풀어야**" 의지 천명

"**한미 견해 같을수 없어**"... 노골적 선긋기 시도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이번 사태를 외교적 노력으로 풀

거나야 한다는 정부의 대응기조를 다시 한번 천명함으로써 대북 강경론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북신제공격론 등을 주창한 일본에 대해서는 친설적으로 비판을 기했지만, 미국에 대해선 말은 아끼는 노 대통령이 '간접제동'으로 할 말을 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엄중하다는 현실 인식의 발로로 보여진다.

노 대통령이 이날 언론에 공개된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쉽하고 언급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온 발언을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는 무엇보다 단계별 대북 제재조치를 구체화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미국의 강경부드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일본과 함께 안보리 대북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클린턴 행정부 때의 대북 경제제재 복원 검토, 한국에 대한 PSI(확산방지구성) 참여 확대 요구 등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종석 장관의 발언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비난을 받는 등 국내 여론도 대북 강경론으로 흐름 조짐을 보이자, 노 대통령으로선 이에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에 관한 상황인식을 보다 선명하게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여야, 3개 관련 자치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보좌관·교원 등도

지방의원 겸직 못한다

올해부터 유급제가 본격 시행된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과 영리제한 논란(본보 12면)이 끊임없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의 지방의원 겸직 제한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을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교직원까지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밟아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밟아 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국회의원 보좌관·교원 등도

지방의원 겸직 못한다

금지 대상에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

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겸직제한 추가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학교수 등 교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은 상대방에게 국회의원 보좌관과 고등교육법이 정한 종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에는 휴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개정안을 밟아했다.

여야는 현재까지 지방의원 겸직 금지 확대 등과 관련 3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